

독일 통일의 기적과 그 교훈¹⁾

베르너 캠페터 박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막대한 평화 배당금을 얻게 되었다. 국방비 지출이 대폭 삭감되었고,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독일 영토에서 사라졌다. 반면에 구동독의 산업과 인적 자원의 파괴로 인해 독일의 통일 비용은 엄청났고, 동독인들은 후한 서독의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독 경제가 붕괴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를 위해 일관된 근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동독인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몇 가지 교훈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평화 배당금은 아주 많아야 한다. 따라서, 긴장 완화의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며, 협력, 성실, 상호 인정,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자본 축적의 경로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북한 사람들, 한반도의 긴장 완화, 역내의 평화 그리고 양국의 통일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다.

2010년 10월

1989년 10월 9일, 약 7만 명의 구동독 시민들이 라이프치히 중심가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는 구동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천안문 학살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실제로 라이프치히의 대표적 지도자들 중 세 정당의 수장들이 유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5천 명의 경찰 병력이 철수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구동독은 건국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베를린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는 동독 땅을 밟는 순간 유명 팝 가수처럼 환영 받았다.

이 시위들, 더 정확하게 말해 수개월 동안 벌어진 평화적 촛불 시위와 고르바초프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구동독의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은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사회주의의 자유민주적 개혁과 “유럽의 집(House of Europe)” 건설 프로젝트에 열광적이었다. 그들은 에리히 호네커와 구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측근들의 융통성 없는 태도를 혐오했다. 또한 그들은 민주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믿었고, 정치적 자유를 원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동서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눈에는 고르바초프가 이런 움직임의 상징이었기에 그가 구동독 사회와 정치 분야의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호네커는 개혁적 경향들과 맞서 싸웠다. 고르바초프가 모든 종류의 공개적 대립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호네커의 통치에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해 호네커가 불쾌해 한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다.

10월 9일 시위 이후, 많은 일이 빠르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되었다. 이는 SED 중앙위원회 위원인 귄터 사보브스키의 기자 회견 중 말실수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때 이미 에리히 호네커는 교체된 상태였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단독으로 양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분노했고, 고르바초프도 이를 반기지 않았다. 어쨌든 콜 총리는 교묘하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얻은 이들 모두를 제쳤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통일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의 촛불 시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도 꿈에서조차 통일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예기치 못한 일이었기에 독일의 통일은 역사 속 우연처럼 “그저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 우연 그리고 기적은 특이하고 드문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단독으로 양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콜 총리는 교묘하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얻은 이들 모두를 제쳤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포럼 주최 측이 2009년 말 경 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과연 이 벅찬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우선 나는 통일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역사적 조건들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서 몇몇 건설적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통일 과정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때도 알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 수 있었을 지 이 글에서 자문해 보려고 한다.

[역사적 조건과 우연성]

2차 세계 대전과 유럽 통합 이후의 “독일 문제”

프랑수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에 대해 이런 믿음이 있었다. “독일이 두 개 있어도 좋을 만큼 나는 독일을 사랑한다(I love Germany so much that I am happy to have two of them).”

이 말은 소위 “독일 문제(German Problem)”를 가장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다. 독일은 19세기 프로이센의 통치 하에 통일이 되었다.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으며, 제도적 혁신과 과학의 발달로 순식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파괴와 죽음을 불러온 큰 전쟁을 주변국과 세 번이나 치를 만큼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은 다시금 유럽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구동독도 곧 동유럽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서 양 진영의 국가가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 그리고 냉전 시대에 두 개의 독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과연 그리 나쁜 일이었냐고 자문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의 국민들과 정치 세력들은 통일에 대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서독은 유럽 통합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얻었다. 우리는 동서 양 진영의 현재 상황(*status quo*)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빌리 브란트와 에곤 바르가 추진한 ‘긴장완화 정책’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경제적인 면이나 이산가족의 관계 유지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구동독의 형제들과 조화로운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월의식을 숨기면서 안으로는 서독의 경제와 사회를 이상화시키는 한편, 밖으로는 사적, 공적인 경로를 통해 구동독에 사는 우리의 사촌들을 자상하게 도왔다. 하지만 통일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 대해 인위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냈으며 드러나지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으며, 제도적 혁신과 과학의 발달로 순식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파괴와 죽음을 불러온 큰 전쟁을 주변국과 세 번이나 치를 만큼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

않은 원한도 아주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또는 실재했지만 깨닫지 못하기도) 되었다.

유럽 통합에 대한 독일의 열정은 이웃 국가로부터 환영 받았다. 우리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유럽을 이끄는 리더십을 프랑스에 내주었다. 우리는 국수주의적 감정을 내려놓고 신흥 유럽연합의 물주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모든 일에 동조했다.

이에 비해 긴장완화 정책은 훨씬 더 대담한 제안이었다. 초기에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정책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후 이미 냉전은 그저 현상 유지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빌리 브란트와 에곤 바르는 당시의 정치 지형 아래에서 평화와 번영은 정직하고 진솔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긴장완화 정책은 이념 공방, 상대방을 비하하는 태도,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한 공격적인 흥정, 또는 소심한 양갈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역사적 허물 때문에 동맹국들(또한 독일 시민들과 보수당들)이 우리의 긴장완화 정책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무기와 군인이 많은 구동독과 서독, 이런 독일에서 화해 이니셔티브가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친 유럽 통합과 긴장완화 정책을 통해 서독은 서방 국가와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또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실무 차원의 접촉들을 통해 양 독일 국가 간의 신뢰도 점차 커져갔다.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독일 통일이라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년에 걸친 유럽 통합과 긴장완화 정책을 통해 서독은 서방 국가와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또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실무 차원의 접촉들을 통해 양 독일 국가 간의 신뢰도 점차 커져갔다.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독일 통일이라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 문제”와 유럽 통합에서 한반도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 다행인 것은 ‘한반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에 터를 잡았던 국가는 한 번도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떠한 주변국에게도 통일된 한반도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긴장완화 정책 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독일 주변국들에게 공포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터무니없게 들릴지 몰라도, 만약 남북한이 화합하여 긴장완화 정책,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또한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이웃 국가들과 동맹국들의 반대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 독일과 유럽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긍정적인 교훈은 국가 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다. “한반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

때문에 남북한이 신뢰 구축 정책을 펼치는 데 주변국들의 압박은 덜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은 보통 윈-윈 전략이며 이 과정이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 결부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서방 세계와 한 구동독 대부분의 무역이 서독 및 EC(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C와의 무역을 통해 구동독은 서독과 동일한 무역 규범 체계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이 되기 훨씬 전부터 구동독의 경제는 서독과 유럽의 무역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

3. 그렇다면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은 어떤가?

여기서 우리는 브란트의 긴장완화 정책이 전적으로 정직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브란트는 두 독일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긴장완화 정책을 구동독(혹은 동유럽) 체제를 붕괴시키고 중국에는 통일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긴장완화 정책의 도구적이고 목적론적 측면들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당시 브란트는 이러한 의도를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 대체로 브란트와 독일 정치가들은 구동독 및 동유럽 내 반대 세력의 지원을 거부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긴장완화 정책의 논리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구동독과의 긴장완화 정책과 협력에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또한 긴장완화 정책으로 인해 양 독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었고, 수없이 많은 협약들을 통해 두 국가의 관계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내독 관계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일상적이고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서독을 방문하는 구동독인과, 구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동독인이 서독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접했고, 독일 접경 지역의 서독인도 구동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아주 많은 서독인이 구동독의 저녁 아동 프로그램인 “잠의 요정”을 시청했다. 대체로 서독인들은 구동독의 뉴스와 선전 프로그램을 허무맹랑하게 연출된 연극으로 여겼고 이는 서독인이 구동독에 대해 느끼는 상투적 이미지가 되었다.

물론, 내독 관계는 많은 문제와 좌절로 가득했다. 유럽공동체(EC) 회원 국가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다. EC 국가들은 점차 긴장완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였고 연대 정신에 따라 서독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노력 또한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체로 브란트와 독일 정치가들은 구동독 및 동유럽 내 반대 세력의 지원을 거부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긴장완화 정책의 논리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구동독과의 긴장완화 정책과 협력에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도 없었다.

우연성과 리더십

역사는 단순히 구조적 조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의 정점으로 부상했던 것은 그러한 우연적 상황 중 하나이다. 두 명의 전임자들은 지병으로 일찍 사망했고 고르바초프의 잘 짜인 개혁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비에트 연방, 소련 제국, 바르샤바 조약,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종말로 귀결됐다. 따라서 구질서의 종말 또한 여러 우연적 사건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더 큰 사건이었다.

빌리 브란트 또한 이러한 우연적 요소 중 하나이다. 그는 냉전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화해 무드로 전환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바로 그 시점에 꼭 맞는 인물이었다.

헬무트 콜도 긍정적인 우연으로 작용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콜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양독의 평화적인 통일이 침몰해 가는 자신의 정부를 구해 줄 수 있으리라 재빨리 간파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단 3주 만에 '10개항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는 개혁의 뼈아픈 결과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위험할 정도로 위상이 약화된 고르바초프의 시대가 가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헬무트 콜은 교묘히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갔고 결국 승리했다.

우연성에서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 첫째, 관련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둘째, 상황 변화를 이끄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한계를 넘어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우연성에서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
첫째, 관련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둘째, 상황 변화를 이끄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한계를 넘어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고르바초프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독일 통일 과정의 잠재적 교훈

통일의 이점

종종 독일의 통일 비용이 과도했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로 매년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돈은 서독 국민총생산(GDP)의 4% 정도였다. 이는 물론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한다면, "비용은 생각지 말라. 독일 통일은 엄청난 성공이었고 매우 큰 이득이었다."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독일은 언제나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저주와 고통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유고슬라비아와 달리 평화롭게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독일은 매우 운이 좋았다.

- 동독 주민들은 법치 국가에서 살게 되었고,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 동독은 대다수 거주자가 서독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과거 서독은 서유럽의 변방 지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10개 이상의 이웃 국가에 둘러싸인 유럽의 중심 지역이 되었고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든 독일인들은 유럽 전 지역을 어떠한 제재나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냉전 비용이 엄청났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통독 이후, 평화가 가져다 준 이점 중 하나는 엄청난 국방비의 절감이며, 이로 인해 동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수월해졌다.

통일은 기적처럼, 또는 어떤 이들이 얘기하듯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다.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질서 있는 통일 과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는 질서와 관리라는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 받은 독일에게 아픈 경험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동독사람들은 민주 사회주의와 민족적 통합 사이에서 방황했으며, 서독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 새로 얻은 땅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서독인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콜 총리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가 속한 기민당(CDU)이 1990년 3월 구동독 총선에서 크게 승리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독일 총리로 다시 선출되었다. 변화의 기준들이 확립됐고, 서독의 조직/법률/경제 부문 등의 체계가 동독에 이식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질서가 잡혀갔고 통제가 가능해졌다.

초기의 부정부적 상태 속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그 때 알았다면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이 행한 모든 실수의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동독 경제를 위한 적절한 현대화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 둘째는 동독 경제와 사회, 정치의 재구축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저지른 실수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동독 경제를 위한 산업개발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했다.

1.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당시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했고 충격 요법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그 때 알았다면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이 행한 모든 실수의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동독 경제를 위한 적절한 현대화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 둘째는 동독 경제와 사회, 정치의 재구축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경이 개방되자 사람들은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동서독 간의 임금 격차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동서독의 통화 통합이나 두 독일의 마르크화 간의 환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전적으로 국경의 소멸과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2. 같은 이유로 서독은 동독에 있던 기업들의 경영에 결코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재조직, 재교육, 자본 재구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3. 1차 세계 대전 직후 케인즈가 말한 *자금 이전 문제(transfer problem)*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케인즈에 따르면, 전쟁 배상금을 받는 국가는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반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는 호황을 맞게 된다. 서독 및 다른 유럽 기업들로서는 다행스럽겠지만 이 이론은 정말 현실화 되었다. 이들이 경기 호황을 맞은 반면, 서독과 기타 지역에서 유입된 엄청난 유·무상 자금(transfers and credits)으로 인해 동독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 들었다.
4. 서독 기업의 1/3 정도의 생산성과 2/3 정도의 임금 수준이었던 구동독 기업들이 경쟁적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는지 결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임금 부분은 동독 국경 개방의 결과이다. 국경이 개방되자 사람들은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동서독 간의 임금 격차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동서독의 통화 통합이나 두 독일의 마르크화 간의 환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전적으로 국경의 소멸과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5. 환율은 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었다. 구동독의 계획 담당 행정기구는 기업에게 유동 자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은행을 이용했다. 구동독 기업인에게 자기 기업의 은행 빚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동독 기업들의 명목 회계 부채는 통일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국가 소유에서 새롭게 민영화된 은행들의 채권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의 회계 부채는 고 평가된 환율로 전환되었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동독 기업들을 더 궁지로 몰았다.²⁾ 주지하듯이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파산했다. 그러나 다행히 새로이 민영화된 은행들 - 모두 서독 은행의 지부가 된 - 은 정부로부터 이자 지불 보증을 받았다. 이는 그들에게 매우 수지 맞는 장사였는데, 통일 후 이 은행들의 채권은 전체 동독 은행권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의 10배에 달했다.
6. 정부는 자산이 원 소유주에게 귀속되기 전에는 경제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는 “*배상 전 반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자산을 먼저 경제 활동에 투입하고 그 이후 원 소유주나 상속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구동독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붕괴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파산에 이르렀고, 1990년대 동독 경제는 붕괴했다. 이 상황을 유일하게 피해간 것이 건설업계였는데 인프라 구축, 도시 및 주거 현대화에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호황도 단지 1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서독 기업들의 관심은 은행(예를 들어, 이전의 국유 은행)과 같은 특정 분야, 그리고 동독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권에 한정되어 있었다.

독일 정부는 뒤늦게 민간 실물 경제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시행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자본은 이미 자본 집약적 산업에 투입된 이후였기에 아주 제한적인 고용 효과만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 (또는 정책의 부재)의 결과, 실제 실업률과 드러나지 않은 실업률은 크게 치솟았고, 고용은 대대적인 하락 국면을 맞게 되었다. 통일 전 구동독에는 11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동독의 일자리는 5백만 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미니잡과 비정규직이다.

인구 대비로 볼 때, 구동독은 서독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구조 해체가 있었고, 많은 동독인이 고용 및 훈련, 노동 인력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잃었다.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갖춘 많은 근로자들이 서독으로 이동했고, 이는 동독의 경제적 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9년 이래 동독 인구의 15%가 동독을 빠져 나갔다. 도시 인구의 20%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가옥들 그리고 심지어 도시 구역 전체까지도 철거하는 ‘동독지역 도시 개조 프로그램(Stadumbau Ost)’을 실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철거 정책이 건설업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동독 경제의 붕괴는 독일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이다.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자금 중 대부분은 동독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었다(실업보험, 조기 퇴직, 연금, 의료 및 간병보험, 공적 부조). 동독의 경제활동과 고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출연금도 낮을 수밖에 없었고, 국민 1인당 부담 비율은 서독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매우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독의 국민 역시 서독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공적 자금의 지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 한국의 분단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남한은 모든 역량을 다해 북한

정책들 (또는 정책의 부재)의 결과, 실제 실업률과 드러나지 않은 실업률은 크게 치솟았고, 고용은 대대적인 하락 국면을 맞게 되었다. 통일 전 구동독에는 11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동독의 일자리는 5백만 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미니잡과 비정규직이다.

북한의 수출입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가 사라진지 오래인 지금, 북한이 세계시장, 현대 기술 및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재건 및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일 것이다.

경제의 현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앞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피하고자 한다면, 남북 간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투자를 통해 북한 경제가 자립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출입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가 사라진지 오래인 지금, 북한이 세계시장, 현대 기술 및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재건 및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일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정상화(normalisation)”로 발생하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재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비용 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력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때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 개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력의 이동은 임금 상승 압력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압력은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북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만이 창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 시장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북한 기업의 구조적 기술적 현대화를 위해 최소 5년에서 10년이 필요할 것이다.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가가 일정 부분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내 우수한 (또는 그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노동력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북한 노동력의 유입은 남한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남한의 노동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3. 북한의 기업과 기관의 구조적 기술적 현대화는 실제 몸으로 부딪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알려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연구 학습은 학습자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보다는 자신의 경험적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 동독의 경우 개인과

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에 의한 학습 과정이 동독의 산업 붕괴로 중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서독 관계자들의 실수로 일어났지만, 이러한 실수로 인해 동독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4.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원소유자에게 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유권 반환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원소유자의 요구를 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이 소유권 반환 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다. 소유권 반환은 주요한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 확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적 불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 주민들은 동독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동독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 서독인(the Wessi)은 통일 과정의 부정적인 요인과 실패를 동독인(the Ossi)의 본질적인 성향과 구동독의 사회화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서독인은 동독 출신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반면 동독인은 서독인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서독인을 우월한 서독인 또는 동독인보다 우월한 척하는 서독인(Besserwessi)이라 불렀다. 서글프게도 냉전 시대의 낡고 진부하고 전형적인 사고가 독일인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동독인의 관점은 당연히 서독인과 달랐다. 갑작스럽게 사회 전반을 강타한 심각한 실업 문제는 동독인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정부의 공적 자금과 같은 불로 소득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많은 동독인은 서독 기업의 이권 행위로 인해 동독 기업이 황폐화되었다고 여겼다. 동독인은 자신들이 동독의 경제와 사회에 더 이상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느꼈다. 이는 동독인의 존엄성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그들이 믿어왔던 사회주의 사상에서 등을 돌리게 했다.

동독 주민의 70% 이상은 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수의 동독 주민들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주민의 약 80%는 사회적 정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50% 이상의 주민들은 구동독 시절의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50% 이상의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선 민주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단지

서독 주민들은 동독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동독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 서독인(the Wessi)은 통일 과정의 부정적인 요인과 실패를 동독인(the Ossi)의 본질적인 성향과 구동독의 사회화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기적이 구동독이 경제적 기적을 일군 이후에 일어났다면 동독 주민들은 그들 자신과 새롭게 일구어 낸 국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벽을 무너뜨린 기적만이 동독인의 성과였고, 독일의 통일 과정은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큰 서독인의 거의 완전한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

22%만이 자신들을 완전한 독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동독 주민의 64%는 자신들이 2등 국민이라 여기며, 73%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75%의 동독 주민은 서독인이 구동독인이 일구어낸 성과를 과소평가한다고 느끼고 있다.³⁾

이는 암울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벽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만약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기적이 구동독이 경제적 기적을 일군 이후에 일어났다면 동독 주민들은 그들 자신과 새롭게 일구어 낸 국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벽을 무너뜨린 기적만이 동독인의 성과였고, 독일의 통일 과정은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큰 서독인의 거의 완전한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동독인의 발언권과 동력은 극히 미약했다. 서독인은 동독에 서독의 *기본헌법*, 법률, 제도, 정치/행정 절차 등을 선물했다. 서독인은 또 하나의 서독을 만들고자 많은 전문가들을 동독에 보냈고, 그들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서독인은 자유 시장 사상의 미명 아래 동독의 기업을 해체했다. 서독은 서독 기업들이 동독에 진입할 수 있는 특전과 함께 동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선별 취득하고, 가장 유망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독은 과거청산과 함께 구동독 정권의 국가보안 기관이었던 슈타지의 협조자들에 대한 기소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서독인은 구동독의 개혁 세력과 협조를 하거나 이들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서독은 쾰른 시위와 호네커 정권을 무너뜨린 구동독의 시민 세력을 무시했다.

한 마디로 독일의 정치 경제적 통일 과정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요소로 가득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아주 작은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던 동독인을 생각할 때, 동독 주민의 불만이 높은 것은 비대칭적 불균형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러 변화를 통해 동독인은 (경제 및 고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치적 권한 및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 상황, 이동(여행)의 자유 등)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이들이 이득을 본 부분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동독 주민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개운치 않은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긴장완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했다. 반면에 독일의 통일 과정은 대부분 일방적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서독이 거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일 과정을 조율하고 이끌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불균형과 동독인에 대한 배제는 통일 과정의 결과와 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동독인은 서독의 독점이 이러한 결점과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독인은 스스로를 희생자라 여기며 서독 동포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특히 동독의 청소년층에서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극우주의는 이러한 분노와 일자리 부족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독 주민 사이에서 구동독을 미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된다.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약점과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에서 평등과 존중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상대적 약자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권한과 통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는 한편, 상호 간의 오해, 분노, 그리고 양극화 현상 등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

긴장완화 정책

1.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 직면하게 될 장애와 어려움은 독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긴장완화 정책은 오직 협력, 상호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권 교체와 같은 숨겨진 의제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3. 긴장완화 정책은 양자 및 지역 협력, 기구 간 통합을 통해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할 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성공적인 긴장완화 정책은 평화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충돌과 파괴의 위험이 크게 감소된다. 양자 혹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면에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지출은 북한 경제의 현대화 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
5.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과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도 구조적인 조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명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들에게 현재 가능할 것으로 인지된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긴장완화 정책은 평화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충돌과 파괴의 위험이 크게 감소된다. 양자 혹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면에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다.

[통일]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권리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와 법치,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행보를 내딛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이제 우리는 유럽 전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1. 비록 독일 통일이 값비싼 비용을 치루긴 했지만 통일은 대성공이었다. 독일은 이제 냉전의 최전선에서 후퇴했으며, 파괴적인 무기가 해체되고 무장 군대의 규모가 작아졌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권리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와 법치,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행보를 내딛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이제 우리는 유럽 전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서독이 동독 경제의 현대화에 대한 분명한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사실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통일 과정에서 파산했다. 그 결과 동독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고 약 1/6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3. 동독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독 주민들과 같은 사회적 권리(연금, 건강, 장기요양 보험, 실업 수당, 공적 부조 등)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주로 서독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이전 때문에 독일 통일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갔다.
4. 한국은 분명 독일보다 상황이 좋다. 첫째, 남한의 사회안전 비용은 독일보다 훨씬 적어서 북한 주민 전체가 이 시스템에 편입되더라도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 대신 남한의 자원은 북한의 경제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일관된 전략을 통해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수록 북한 주민의 안녕과 긴장 완화, 지역 평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독일 통일은 서독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식민화 과정이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구동독의 반체제 그룹을 포함해 구동독인은 통일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은 서독인의 오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는 배움이나 적응의 과정에서 동독인뿐만 아니라 서독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와 정치적 질서에 대한 불만 정도가 매우 높았다. 동독인들은 2등 국민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 새로운 장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난 것이다.

6.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존중과 평등의 태도를 유지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과잉보호 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통해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그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

[결 어]

독일 통일은 거의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일하게 실패한 것은 -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 누구도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 동독 경제에 대한 분명한 현대화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20년 전에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이전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를 포함해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독과 서독의 노동 시장이 통합되면 동독의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서독 정부가 동독 기업들이 서독 및 전 세계와의 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 동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고용의 붕괴는 기업의 파산과 함께 나타났으며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붕괴의 비용은 사회보장시스템(실업,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그 지출 규모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독일 통일로 인해 서독의 노동자(사회보장비)와 납세자들이 그토록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만일 우리가 동독 경제를 현대화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성공은 완벽했을 것이다. 동독 경제는 자력으로 성장과 자본 축적을 감당하면서 “정상화”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서독의 납세자 및 사회보장비 부담은 통합 기간에 제한되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주된 실수가 적절한 경제 전략의 부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동독인이 통일 과정에 공동결정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공동된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형성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희망을 공유했다라면, 그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했다라면 통일 과정은 훨씬 더 잘 진행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과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는 직업적으로 성공한 동독인을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총리로 재임 중인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라는 점은 흥미롭지 않은가? 일부 아주 유명한 뉴스 진행자와 앵커우먼도 동독 출신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독일

우리가 동독 경제를 현대화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성공은 완벽했을 것이다. 동독 경제는 자력으로 성장과 자본 축적을 감당하면서 “정상화”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서독의 납세자 및 사회보장비 부담은 통합 기간에 제한되었을 것이다.

축구 선수인 미카엘 발락도 있다. 이러한 예는 아주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동독인(East Germans)이라는 표현이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개념조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인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차별을 받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의 통일 과정은 드디어 모든 영역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 후주 |

- 1) 본 발표문은 이화여대 제9회 김옥길 기념강좌 “Global Peace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2009.11.2, 서울)의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건설적 비평을 해 준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 2) 고평가된 환율은 동독 시민들의 예금 보호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책정되었다.
- 3) 출처: Data bases of SFZ/leben; Institut für Interdisziplinäre Konflikt- und Gewaltforschung, Universität Bielefeld; Friedrich-Ebert-Stiftung.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0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